예산 적게 든다는 BRT…광주시 "시비 3000억 더 소요"

〈버스 중앙차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찬반 주장 팩트체크

반대측 "1589억이면 설치"… 전문가 "BRT, 교통수요 감당 못해"

市 "도로 확장·개선 필요"… 부산도 추가 설치 여부 놓고 논란 중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하철 대신 내놓은 교통수단이 BRT(Bus Rapid Transit)다.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와 정거장 등을 설치하고, 별도의 신호를 통해 버스가 신속하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운행범위에 따라 광역형과 도심형, 운영 형태에 따라 BRT 전용차량만 운행하는 전용형과 일반버스 진출입이 허용되는 혼용형이 있다.

반대 측은 현재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따라 BRT를 바로 적용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이 광주의 도로 여건과 국비 지원 체계를 감안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완석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시교통 전공)는 "광주지역이 확장된 현재 상태에서 BRT만으로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BRT도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그 기능과 광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렵겠다고 판단해 현재의 저심도 지하철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BRT를 도입하면 1조 4229억원의 시비가 들어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비(2조579억원)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8232억보다 3137억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BRT를 설치하는 비용을 1589억으로 산정한 반대측의 10배에 이른다.

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BRT 사업비 가운데 50%만 국비가 지원되는데다 도로 신설 및 개선 비용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밝혔다.

BRT가 설치된 세종시의 기준(km당 166억7000만원)으로 BRT 건설비가 5720억원이며, 이 가운데 2860억원이 시의 부담이다. 또 2호선(연장 41.9km)에 BRT를 놓기 위해서는 도로를 일부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현재 2호선이 다니는 도로를 기준으로 연장은 42.05km이며, 이 가운데 6차로 미만이 9.61km다. 또 교차로가 145개가 있어 입체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BRT에 맞춰 도로를 개선하는 비용이 8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BRT 설치는 3~4차로의 감소로 이어져 버스 이외의 승용차, 트럭, 택시 등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산의 경우 동래역 내성사거리~동백역 운촌삼거리~해운대(1차 1단계) 구간 가운데 내성사거리~운촌삼거리 8.7km만 운영 중이며, 나머지 사업은 주민 반발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태다. 6차로 4.2km, 7~10차로 4.5km 등 시가지 외곽도로를 이용해 BRT 예산은 230억원으로 비교적 적게 들었지만, 수시로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면서 광주와 마찬가지로 공론 과정을 거쳐 나머지 구간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 역시 BRT 도입 경험이 있다. 2011년 수완지구를 조성하면서 임방울대로에 버스중앙차로를 만들었다가 1년여 만에 폐지한 것이다. 기존 차로와의 연계 미흡, 진출입 불편, 교통사고 증가 등의 민원이 잇따른 것이 그 이유였다.

도시 교통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BRT는 대중(공공)교통의 편의성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시는 지난 2010년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광역권 BRT 기초조사'를 토대로 BRT를 설치하려 했으나 B/C(비용편익분석)가 0.526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포기한 바 있다. 당시 BRT 설치 대상은 6차로 이상인 13개 대로에 불과했다.

지하철 방식인 도시철도 2호선을 BRT로 변경하면 시간도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BRT 설치 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에만 일반적으로 3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공사 기간은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사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BRT가 버스 통행을 개선한 수준으로 저심도 도시철도 대체할 수 없으며, 정책적으로 광주와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BRT는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나, 도심 내 BRT는 도로 구조와 교통량, 통행여건(속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준영 광주시 건설교통국장은 "대전, 부산 등 BRT를 설치하려는 도시마다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만큼의 논란을 겪고 있는데, 유독 광주에서만 BRT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차로의 급격한 감소는 그 충격이 운전자만이 아니라 주변 상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2호선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시민단체 현대차 투자유치 성사 촉구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을 하루속히 모색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교황 방북 수락 여부 세계가 주목…교황청은 '신중 모드'

문대통령 내일 교황 면담

이해찬 "내년 봄 방문 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 면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과연 수락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프랑스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저녁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이탈리아·교황청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정오 교황청 사도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교황의 방북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교황이 이 자리에서 방북을 흔쾌히 수락할지, 만약 수락한다면 방북 시점까지 언급할지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는 등 교황의 방북을 둘러싼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황이 방북하면 크게 환영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이 있는데 그 뜻을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에게) 전달하셔서 가능한 한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볍게 흘릴 수 없는 여당 대표의 말을 외신을 통해 접한 교황청에서는 교황의 방북 시기까지 특정한 이런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국 측에 문의하는 등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팔로마 오베헤로 교황청 공보실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초청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황청은 교황의 방북과 관련해 아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오베헤로 부대변인은 교황이 방북 가능성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한 큰 기대와 관심을 이해한다"면서도 "기다려보자, 지켜보자"고 말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처럼 교황의 역사적인 방북 수락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측에 교황청은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벨기에 아셈 회의서 영국·독일·태국과 정상회담

대북제재 완화 협조 등 당부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8일(현지시각)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벨기에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메이 총리 간 한영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에서 남북,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정상과의 회담인 만큼 이 자리에서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 21개국, 유럽 30개국 정상이 모여 테러와 사이버 안보 등의 문제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구상과 의지를 최대한 진정성 있게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도 한-독일·한-태국 정상회담을 각각 열고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내온 영상메시지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가 실현된다면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회담의 성공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했다.

문 대통령과 쁘라윳 총리간 한-태국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쁘라윳 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양국 관계의 발전을 기약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